



‘43년 만의 화해’ 특전사 모역 참배 5·18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대표와 특전사동지회 총재 등이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18 당시 숨진 특전사 장병 모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전범 기업 봐주는 매국 외교 중단”

정부 해법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배상안’ 거부
 “日피고기업 책임 면책...과거사 오명도 씻겨줄 것”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구상에 ‘매국·굴욕 외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역 6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단체 일동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은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켜주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만 책임을 물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같이 말했다.
 단체는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열어 해결안을 공

식화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구상은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내용으로, 일제에 고통받은 피해자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구상안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와 역사 청산이 아니다”며 “수십 년 동안 힘겹게 싸워 쟁취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반대로 청산하는 매국이 자 망국 해법”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 같은 저자세 외교는 향후 대일 관계에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해결한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는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 일본에 과거사 청산과 사죄, 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경술국치를 가져온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의 결정은 ‘전범국’ 일본이 가진 과거사에 대한 오명을 터는 기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군사대국화로 향하고 있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도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가 진행 중인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행위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당장 불의한 역사 뒤바꾸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도 “(정부의 방식

대로 마련된)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드시 일본의 사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강제징용과 관련한 정부 해법안을 밝혔다.
 정부는 한·일 기업의 기부로 조성된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안인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배상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점에 따라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 과정에서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도적인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올해 수소승용차 200대 보급

1대당 3250만원 보조금 지원...오늘부터 접수

광주시는 올해 65억 원을 투입, 수소승용차 200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대상은 구매신청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연속,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 등이다. 구매 신청은 1대로 제한한다.
 광주시는 올해 보급물량 200대 중 180대를 일반 시민과 법인 등에 보급하고, 20대는 취약계층·다자녀·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 우선대상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출고 순으로 선정한다. 차량 1대당 3250만 원(국·시비)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수소승용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 제출하면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오는 18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과 함께 대·폐차 대상 시내버스 10대를 수소시내버스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수소승용차 1240대와 수소버스 22대가 각각 보급·운행 중이다.
 광주에는 현재 ▲진곡수소충전소 ▲동곡수소충전소 ▲임암수소충전소 ▲벽진수소충전소 ▲월출수소충전소 ▲장등수소충전소 등 6곳 수소충전소 7기가 운영 중이다. 다음 달 중에는 매월수소충전소(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하는 등 올해 27기가 신규로 구축, 수소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불편을 덜어준다. /조일상 기자

21~24일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광주 7시간 40분...귀성 21일 오전·귀경 23일 오후 집중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이후 일상회복으로 맞은 두 번째 명절로 귀성·귀경·여행 등 2650만명에 달하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총 2648만명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평균 530만명이다.
 연구원은 이 중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해 2.1%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버스 3.8%, 철도 3%, 항공 1.1%, 해운 0.4%로 전망됐다.
 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 오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측되며, 귀경은 설 다음 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귀성과 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22일과 다음 날인 23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일평균 약 519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9%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주말 이용대수인 428만대보다 약 21%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귀성은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형안 기자

코로나시대 전남 관광으로	2번
검찰, 김성태 본격 조사	3번
광주 소매 유통 경기 악화	4번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